

옛 송원콘도 보증금 피해 1000여명 줄소송 하나

회원권 계약자 “보증금 돌려 달라” 근저당권 설정 은행 상대 승소

법원이 은행의 ‘사해행위’로 콘도미니엄 입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으며 회원권 계약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자 손을 들어줬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보유한 계약자만 1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은행을 상대로 한 무더기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허위 계약을 하는 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환수될 수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9단독 김선범 판사는 옛 송원콘도 입회 계약자 A(60)씨가 우리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은 A씨에게 231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콘도회원권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스키야부리조트(옛 남지리산관광개발)이 우리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2371만1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송원콘도 회원들은 계약 체결 뒤 보증금을 납입하는 동안 IMF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원콘도측을 믿고 보증금을 전액 납입했으나 회사측은 이러한 회원들을 배신하고 전 객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 처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은행과 수협중앙회가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

석하지 않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원콘도는 ㈜송원의 계열사였던 남지리산관광개발(주)에 의해 운영돼 오다가 IMF 직전인 지난 1996~1997년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됐다. 콘도 측은 이후 지난 2010년께 전 객실에 대해 우리은행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자산의 대부분을 처분했다. 이 때 회사측을 믿고 보증금을 납입한 회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A씨 변호인측은 “2009년 감사보고서로 확인되는 회원 보증금은 153억여원에 달하고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피해 회원 수를 산출하면 최소 1000명, 최대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번 판결로 송원콘도 피해자들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송 특성상 오는 8월초까지 소송이 제기돼야 한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현재, 송원콘도 건물은 지난 4월에 모든 경매절차가 완료됐고 콘도건물의 낙찰자는 명칭을 바꾼 뒤 콘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 송원리조트회원들을 승계할 의사가 없어서 송원콘도에 보증금을 낸 회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한편, 이들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 설명회는 오는 9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법무법인 드림 주최로 열린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법원, 검찰 단체장 불기소 잇단 뒤집기

선거법 위반 혐의 고홍군수 이어 보성군수도 재판 회부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현직 군수를 기소, 법정에 세울 것을 명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박병철)는 6일 이용부 보성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도록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검찰은 기소를 해야 한다. 법원이 결정으로 검찰에 기소를 명령할 수 있어,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광주고법은 앞서 박병중 고홍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도 일부 인용,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령했

다. 공교롭게 이들 사건을 모두 불기소 결정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기소를 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됐다.

재정신청 사건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법원이 형사처벌 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반응이 많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을 존중해 유지 심증이 상당한 피의자만 재판에 넘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증거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이인지, 부실 수사 여부는 확인해봐야 할 일”이라며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대한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집요한 ‘보복운전’의 말로

“112에 신고할 엄두도 못 내고 앞만 보고 차를 몰았다”

순천에 사는 A(49)씨는 지난 3월 14일 새벽 출근길 목숨 건 질주를 한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 신고받고 출동했던 경찰조차 “별일 아니다”는 피의자들 말만 믿고 돌아가면서 40여분 넘게 난동을 피운 사실을 다시 생각하는 것조차 끔찍하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순천 연향동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24km 떨어진 여수 산단 자사의 회사까지 은색 외제 차량의 ‘위협’ 운전을 피해 무작정 질주했다.

A씨는 당시만 해도 왜 쫓기는지조차 모르는데,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만 했었다고 한다. 나중에서야 자신이 우

회전하면서 끼어들었던 게 ‘보복운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100kg 이상 거구의 사내 류모(31)씨 등 3명이 타고 있던 BMW 차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거나 A씨 차량 앞을 지그재그로 달리며 위협하는 건 기본이었다. 액션 영화 한 장면처럼 도로 한쪽 끝 차선으로 차량을 계속 밀어붙이는 행위도 수차례나 이어졌다.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에서도 BMW 차량은 수차례나 A씨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했다. 차 간 거리가 좁혀질 때면 수시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내뿜었다. “당장 내려 이×!” BMW 차량의 위협 운전은 A씨가 회

끼여든 차량 쫓아 순천서 여수까지 30분간 급제동·폭언 회사 앞서 40분 난동...한달만에 3명 적발 구속영장 검토

사에 도착할 때까지 30분간 계속됐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잠시 한눈을 팔면 곧바로 사고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다. 평소 잘 보였던 경찰서나 파출소도 유독 이날은 눈에 띄지 않았다. 누가 흥기로 변한 BMW를 신고해주면 좋으려만, 새벽 시간 도로엔 차량도 별로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A씨가 회사 정문을 통과하고 공장 내부로 들어갔지만 류씨 등 3명은 돌아가지 않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별일 아니다”며 돌려보내기까지 했다.

이들은 이후 “(A씨를) 불러내라,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치며 경비원을 위협하거나 회사 정문을 점거하면서 밤

샘 근무를 마친 직원들의 퇴근을 막아선 것이다. 40여분간 공장에서 난동을 피운 류씨 등은 이날 새벽 7시가 넘어서야 분이 풀렸는지 사라졌다.

류씨 등의 범행은 A씨의 직장 동료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뒤늦게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경찰은 1개월여 추적 끝에 최근 류씨 일당을 붙잡았다. 류씨 등은 경찰에서 “그 차가 끼어들자 순간 화가 팍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순천경찰은 류씨 등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흥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공무원들 영창 체험 5·18민중항쟁 35주년을 앞둔 6일 광주지역 5개 구청 공무원들이 서구 치평동 5·18 자유공원을 방문해 영창 등을 체험하며 당시의 가혹했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근로기준법 위반 초과 근로” 금호타이어 노조, 사측 고소 광주고용청, 경위 조사 나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금호타이어(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지회는 고소장에서 회사측이 광주공장 성형 공정 근로자 A(44)씨 등 노동자들에게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주 64시간 근로시간을 어기고 72시간 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용청 관계자는 “사측의 초과 근로 강제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 수천만원 받은 혐의

전남도 간부·순천시 공무원 긴급체포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다시금 신대지구 개발 특혜로 옮겨가는 등 검찰 수사가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일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개발 업체에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현직 전남도 간부 A씨와 순천시청 공무원 B씨를 긴급체포해 조

사하고 있다.

A씨는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업체에 업무 편의를, B씨는 세금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공공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1000여원의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공무원과 해당 개발시행사 대표 등을 각각 구속한 점을 고려하면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불거진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금품수수 액수 등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3일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월주(48) 중흥건설 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농촌 빈집만 골라 텃 30대 철장행

○농번기에 집을 비우고 일을 하러 간 농촌 빈집만 골라 금품을 텃 30대 남성이 철장 신세.

○6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조모(38)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께 강진군 성전면 서모(77)씨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농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량 5대를 추려낸 뒤 강진지역 주요 CCTV 등을 분석해 조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그는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망한 뒤 당장 쓸 돈이 없자 평소 배달 갔던 농촌을 돌며 돈을 훔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강진=남철희기자 chou@

부동산 경매! 특수 물건만이 정답이다!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 1대1 실전 개인 전수
- ✓ 주 1회 3개월 교육
- ✓ 교육 / 임장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등 2200만원
-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공동투자 하실 분!

- ✓ 자금 - 1억원 이상
- ✓ 기간 - 1년 정도
- ✓ 수익 - 연 20% 정도
- ✓ 방식 - 3대1 방식
- ✓ 보장 - 소유권 이전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1억원 이상
- ✓ 제1순위 근저당 설정
- ✓ 낙찰물건에 80~90% 정도
- ✓ 기간 - 상담 후 결정
- ✓ 이자 - 연 10~12% 확정

특수비법 전수하고 활동하고 계신분들!

- 건설회사 사장
- 제조업 사장
- 가정주부
- 전, 경찰서 서장
- 공인중개사
- 광주대학교 학생
- 전, 소방서 서장
- 경매학원 원장
- 채권회사 부장
- 명품회사 사장 등 다수 상담시 오픈합니다!
- 석재공장 사장
- 전, 은행 지점장
- 장례식장 사장
- 전, 도청 직원
- 기사자동차 직원
- 오회회장품 이사
- 아주커 치킨 사장
- 입시학원 원장
- 주유소 직원

부동산 경매 투자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상담예약 요망)